

20년 후의 중국, 어떤 모습일까?*

Richard N. Cooper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본인은 많은 세월 동안 교분을 나누어 온 사공일 이사장님을 오랜 지기(知己)로 생각하고 있다. 본인은 비상근직으로 관여했던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IE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사공일 이사장님과 1년을 함께 지낸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다.

오늘날 중국이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미국 전역과, 런던, 파리, 그리고 베를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짐작할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모로 괄목할만한 업적들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향후 수십 년 뒤 중국의 모습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최근 본인이 느낀 바에 의하면, 중국이 점점 인도와 짝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최소한 미국에서는 중국과 인도 양국을 이란성 쌍둥이로 취급한다. 인도에 관한 시각도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본인은 이번 강연을 중국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본인이 초점을 두고자 하는 2025년은 앞으로 20년 후이다. 2025년은 먼 훗날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작은 변화가 매년 축적되어 중대한 변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계(視界)를 벗어날 정도로 먼 기간은 아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람들 대부분이 20년 전을 기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20년 후도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50년 후는 상상 밖의 일이다.

2025년의 중국경제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중국의 잠재력을 올바르게 지적함과 동시에, 무턱대고 중국을 '차세대 경제강국'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계량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물론 20년 후 중국의 참모습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Royal Dutch/Shell 석유회사가 출간한 'Global Scenarios to 2025'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대외경제여건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6.7%~8.4% 사이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본인은 달러기준 연간 성장률을 7.2%로 추정하고 있는 미국 에너지부

* 이 글은 2006년 6월 30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USDE, US Department of Energy)의 2025년 예측치를 근거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겠다. USDE의 추정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일관성은 내재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여타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에너지 수요예측과도 부합된다. 따라서 중국 경제성장률의 합축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비교기준 추정에서 벗어나 볼 수도 있다.

<표 1>

| | GDP (trillion, 2005 dollars) | | Population (millions) | |
|-------|---------------------------------|-------|--------------------------|------|
| | 2000 | 2025 | 2000 | 2025 |
| China | 1.30 | 7.40 | 1275 | 1445 |
| Japan | 5.09 | 7.61 | 127 | 120 |
| USA | 10.87 | 21.90 | 276 | 350 |

<표 1>은 2000년 대비 2025년의 중국, 일본, 미국 GDP와 인구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GDP는 2005년 미국 달러가치 기준이다(원 자료에는 1997년 가격으로 조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향후 20년 간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실제 절상 폭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은 임의적으로 연간 1%의 절상 폭을 택하겠다. (1950~1975년 기간 중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절상 폭은 연간 0.8%였으나, 실제 엔화의 절상은 1971~1975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의 2025년도 중국 GDP는 달러가치 기준으로 8조 달러에 이르러, 같은 년도 일본의 GDP 추정치를 상회하며 세계 총 생산의 약 10%를 차지한다(위안화의 절상 폭이 연간 1%보다 높으면 중국의 GDP 규모는 더 커진다). 이 수치는 2025년 미국 GDP 규모 추정치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 미국경제 역시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즉, 그 기간 동안에 2005년도 중국의 GDP는 달러가치 기준으로 8.4조 달러, 미국의 GDP는 22조 달러가 되는 것이다. 2025년이 되면 중국의 인구는 14억으로 증가하는 한편, 일본의 인구는 1억2천만으로 감소하고 미국 인구는 3억5천만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수치들은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의 중기(中期) 추정치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예측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미국 에너지부는 달러기준 중국의 연간 성장률을 7.2%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경제사학자인 Angus Maddison이 산출한 1980~1998년도 중국의 연간 성장률인 7.4%보다 약간 낮은 것이다.

이는 또한 중국의 공식발표 성장률인 9.9%를 크게 밑도는 것이며 지난 몇 년간의 실제 성장률보다도 낮다. 성장률이 이처럼 낮은 부분적인 이유는 연간 0.5% 정도로 대폭 감소한 인구증가율 때문이며, 또한 산아억제정책 하에서 태어난 아동인구가 성장기에 이르면서 잠재노동력이 급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달러가치 기준 GDP를 4배로 증가시키려는 정부 당국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위안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일본은 인구감소 특히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1.7%의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최근 몇 년 간의 성장률보다 낮은 3%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 또한 이민 요인이 반영되어도 최근 몇 년 수준보다 낮은 0.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은 1인당 GDP가 일본 및 미국의 약 1/12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이다.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2000년에 비해 5배 이상 부유해질 것이며 50세 미만의 중국인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번영 속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인구변화의 동태는 세 나라가 매우 다르다. 미국의 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면서 조정되고 있다. 20~24세의 연령층에 속하는 그룹, 즉 학교를 막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인구는 2025년까지 약 0.6% 증가할 것이다. 이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일본의 같은 연령층 인구는 연간 1.4% 감소하여 2025년에는 2000년도의 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일 두 나라의 중간수준으로, 20~24세 연령층이 연간 0.7% 감소하여 2000년에 비해 16% 줄어들게 된다. 이 세 나라는 모두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인구 노령화를 겪고 있다. 인구 노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일본인데, 이는 저조한 출산율 때문이다. 중국 역시 2035년 이후에는 총 인구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위의 인구비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점은, 한국과 같은 중진국을 포함한 세계 부국(富國) 사이에서 미국만의 인구구조상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이들 중 사실상 유일한 빈국(貧國)인 중국도 출산율 감소 그룹에 포함된다.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1979년에 채택한 한 자녀 낳기 운동이라는 산아억제정책과 중국 내의 다른 변화들이 원인이다. 미국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부국들처럼 급격하지는 않다. 또한 미국은 이민을 통해 새로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이민인구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유연성을 갖춘 그룹인 젊은 성인으로 집중되는 추세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 여타 부국(중국 포함)들과

크게 대조적이다.

넷째, 중국의 생산액 규모는 미국의 1/3 수준으로, 1988년도 미국의 생산액 규모와 대략 비슷할 것이다. 충분한 세수가 확보된다면, 중국은 대외원조이든 군비지출이든 자신이 원하는 뜻 깊은 국제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1988년도 미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9%인데 비해 중국의 2003년도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였다).

심지어 2025년이 되면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능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엄청난 수치들이 나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시장환율보다는 이른바 구매력평가 전환비율을 근거로 산출한 GDP 규모 비교이다. 가계지출에는 국내에서 조달된 제품 특히 노동서비스가 상당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구매력평가는 국가 간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필요하다. 특히 빈곤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대단히 저렴하다. PPP를 기준으로 한 2000년도 중국의 GDP는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한 GDP의 4.6배이고 일본 GDP보다 70%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일본의 GDP가 중국 GDP의 3.5배였다. 하지만 PPP 기준의 GDP를 사용하여 이러한 비교를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는 개념적 문제이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PPP가 아닌 시장환율로 환산된 시장가격으로 거래한다. 상품, 서비스, 외국인투자 등 모든 무역이 시장환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조차도 상황이 허락되면 토지, 노동, 자본 등의 기회비용을 통해 요소가득률이 높은 교역재 부문으로 이동하여 연계된다.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시장경제가 아니지만, 국내가격은 교역재 가격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자유롭게 결정된다.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25% 정도 절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일부 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해도 현재의 환율과 이른바 PPP 환율 간의 큰 차이를 그리 많이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서 사용되는 추정치에는 연간 1%의 절상 폭을 채택하여, 위안화가 25년 동안 28% 절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는 현실적 문제이다. 중국의 PPP 환율은 약 300개의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충분한 미국-중국 간의 가격비교조사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그러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몇 가지 극단적인 가정을 하였다. 더욱이 앞서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임의의 가중치로 인해 최종결과치에서는 3배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목적을 위해서는 몇 년간에 걸쳐 조정된 시장환율이 시장경제를 비교하는데 적절한 근거가 된다. 환율의 선택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PPP를 기준으로 산출할 때에는 일본보다 70%이상 크지만,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일본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의 무역 및 해외투자 능력은 PPP가 아닌 시장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시장환율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군사장비의 국내생산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군용 비행기 및 선박을 구입할 때 러시아의 수출가격으로 구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가격경쟁력 있는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거대한 중국은 세계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식품, 에너지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훨씬 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산품과 여타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사실 전 세계가 그러하지만 일본이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석탄(대기오염의 가능성 때문에)과 석유(제한된 공급으로 인해)를 비롯한 중국의 에너지 수요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전망에 의하면, 2025년까지 중국의 총 에너지 수요는 연간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의 증가율은 각각 1.3% 및 0.7%이다. 향후 20년 내에 커다란 기술적 타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전망치는 에너지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2025년도 중국의 1일 석유소비량은 1,400만 배럴이 될 것이다. 이는 일본의 2배 이상 그리고 미국의 절반 이상이다.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2배 이상 증가하여 280억 톤에 이를 것이다. 석탄 소비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온실효과의 주요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대기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그동안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에너지 효율성이 미국, 특히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농촌이 더욱 도시화되면서 전력, 교통, 주거 및 여러 가지 도시 서비스 등 모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중국의 GDP가 4배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 및 수요의 구조가 크게 변하여,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는 대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특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훈련 받은 엔지니어들이 노동시장으로 대량 진출하면서 제조업은 기술적으로 더욱 정교한 제품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최근 중국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양상 중 하나는 지난 20년간 4배로 늘어난 대학생의 숫자이다. 본인이 신규 졸업생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중국이 것처럼 급속하게 고

등교육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면서 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우리 모두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답은 신규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흡수될 때 알게 될 것이다.

중국 제품의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제품에 대한 시장저항이 점점증하고, 낮은 기술의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에 대한 빈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미국시장 뿐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시장에서, 가령 가전제품이나 심지어 자동차와 같이 많은 노동력과 조립을 필요로 하는 중국 제품으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은 선별적 저항에 부딪치겠지만 결국에는 용인될 것이다.

2025년에 이르면 중국의 수입액은 아마 1.5조 달러에 육박함으로써, 미국 수입액의 절반 이하이고 EU의 수입액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일본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중국시장은 지금의 미국시장과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다수 수출국의 주요시장이 될 것이다.

WTO 규범준수를 위해 중국에 부여된 잠정적 유예기간과 중국의 WTO 가입조건은 2006년 말에 만료된다. 그러나 WTO 규범들이 중국의 기존 관행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중앙정부가 몇몇 최고 우선순위의 정책을 제외하고는 전국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규범들을 완전히 준수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향후 10년 동안 WTO 규범은 점차 자리를 잡을 것이고, 2025년에 이르면 최소한 상업활동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보다 더 준법적이고 투명해질 것 같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전환과정에서 외국기업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공식채널과는 별개로, 당연히 이들은 중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중국 중앙정부에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중국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지금의 중앙정부와 공산당 민원부서를 포함한 중국 중앙정부의 오래된 역사적 문제이다. 본인은 언론을 싫어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언론은 오보 여부를 막론하고 정부 고위층에 정보를 제공하는 극히 중요한 원천이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만의 이유로 진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상업부문에서는 규정위배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기업인들을 통해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정보를 중앙정부가 알게 되므로, 규정에서 지나

치게 벗어난 지방 및 도시 공무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율·감독이 가능해지게 된다.

적어도 일본이 농업부문에서 중대한 양보를 한다면, 2025년에는 도하(Doha)라운드 무역협상의 종결은 먼 과거지사가 되어있을 것이고 다자간 무역협상 완료 후 이어진 10년의 유예기간도 끝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하라운드 무역협상 이후 새로운 협상이 출범했다 하더라도 2025년도의 무역세계는 도하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만일 몇 년전에 합의된 APEC의 무역자유화 목표(목표일정은 2020년이다)가 실현되면 세계무역은 관세나 기타 수입억제 조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FTA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의 차별적 양상은 완전히 소멸되거나 최소한 자유무역규범의 확대에 따라 감소될 것이다.

중국은 국제경제기구에서 보수적이고 억제된 자세를 취해 왔다. 현상유지 정책이 지금까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은 중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집중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중국이 현재의 성장궤도를 유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계속되어, 세계무역이 차질 없이 지속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요건은 만만치 않다. 중국은 국영기업부문의 고용축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게끔 민간 및 지방 소단위 부문을 육성해야 하고, 수많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실업보험, 연금, 건강보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 내의 새로운 주거, 수자원, 폐기물처리에 대한 급속한 수요증가에 대응해야 하며, 종자개량 및 농업기술의 향상, 효율적인 대규모 관개시설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 내륙 및 서부지역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과 소득상의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의 위탁을 받은 Rand Corporation의 조사연구팀이 2003년에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2005~2015년에 걸쳐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역경시나리오와 이것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든다면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증가, 부패의 만연, 심각한 유행성 질병(SARS 창궐 이전인 관계로 AIDS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북부지역의 수자원 부족문제 해결 실패, 세계 석유공급 와해, 국내 금융위기, FDI 유치 급감, 대만 또는 여타 지역에서의 군사분쟁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심각한 세계경제 침체 또는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체제

전면복귀와 같은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양쪽 다 가능성은 있다. 이 보고서의 가정에 의하면 각 시나리오는 중국 경제성장에 0.3~2.2%의 마이너스(-)적 영향을 미쳐, 2015년까지의 중국 GDP 비교기준 추정치를 3%~24% 감소시킨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타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원만한 국제환경을 바탕으로 번영하고 있으며 중국의 현 지도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화롭게 부상”하면서 자국의 경제 번영을 이루는데 달려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25년까지 최소한 두 번의 새로운 지도부를 맞게 될 것이다. 2025년의 지도부가 약 60세의 연령층이라면, 그들은 1965년경에 태어나 1985년의 급변하는 환경아래 대학을 다닌 세대일 것이며 그들의 부모는 문화혁명의 희생자였거나 드물겠지만 가해자였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적 발전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현재의 중국 지도부와 그 후계자들은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 유지와 크게 변화된 공산당의 정치적 독점에 전념할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언론자유와 경쟁선거와 같은 자유로운 담론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잠재적 불안세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화”의 심화는 이미 그들이 계획한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방주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기술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 중에는 오늘날 여러 지방선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심스럽게 선거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중국 지도부는 범위를 점점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가 이에 대한 개념적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는 서구민주주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부장적 단일정당이 40년 동안 국민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으며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잠재력이 매우 강한데 사실은 교육제도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대만과 남중국해에 살고 있는 2,300만 주민들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그 지역이 수세기 전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였다고 배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말까지의 1세기 동안 유럽인과 일본인(미국인도 덩으로)들의 손아귀에서 비참한 굴욕과 냉대로 고통을 겪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선별적인 누락과 편향되고 다양한 수식어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의 중학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50년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고 나중에 북한 방어를 위해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중국 학생들은 배우지 않고 있다. 또

한 중국인들은 19세기에 있었던 영국과의 회담을 일반적인 외교 “회담”이라 하지 않고 오로지 “굴욕적인 회담”이라고만 한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 교과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본인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을 선별적으로 누락 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수식어로 왜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이 1960년대나 1970년대가 아닌 21세기 초의 중국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본인으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중국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것이 단순한 중국 정책상의 단절현상일 수도 있다(중국 정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특히 여러 부처가 개입될 때 중국에서 이와 같은 단절현상이 나타남을 알고 있다). 아니면 중국 당국이 국제관계에서와는 다른 행동을 자국 내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국내 장애요인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중국 국민의 높은 기대치를 훼손시켜,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가 국내에 조성되는 상황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볼 수 있다. 그리되면 당대의 중국 지도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모욕”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잠복해 있던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켜, 체제에 대한 지지를 다시 끌어 모으기 위해 대외 요인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 대상은 일본이나 미국이 되기 쉽겠지만 러시아도 포함될 수 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국가와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인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전통적인 적성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과는 대만과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 영향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태의 반전은 외국인 투자, 나아가 해외시장을 위협에 빠뜨려 중국의 향후 경제전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가 분별력이 있다면 자국의 민족주의를 촉발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하겠지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두 나라만을 예로 든다면, 1914년의 독일과 1982년의 아르헨티나가 자국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외부의 “적”을 만든 경우이다.

덩 샤오핑(Deng Xiaoping)의 “4대 현대화 운동(Four Modernization)” 중 네 번째는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을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이례적으로 인민해방군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전위부대이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주로 공산당에 하고 있다. 1980년대 초의 인민해방군은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군비, 군사 교리 및 훈련은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중국은 이러한 인민해방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상태이며(그래도 병력면에서는 세계 최대이다) 앞으로도 추가 감군할 계획이다. 그리고 비록 무기기술은 첨단 현대무기에 한참 뒤쳐진 1970년대 수준이지만, 인민해방군은 보다 현대화된 무기류 특히 해군 및 공군용 무기를 갖추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기본임무는 아직도 국내안

정 유지이다. 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이는 인민해방군이 아닌 중국 공안(People's Armed Police)의 임무다. 세계 여타 국가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인민해방군도 중동지역이나 이라크, 코소보 지역의 군사분쟁에 관해 자세히 연구하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 조직 및 교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아마 2025년에 이르러서야 달성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인도를 포함한 모든 주변국들과의 여러 가지 국경분쟁을 해결해왔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거나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분쟁을 둘러싼 협의는 타결되었으나 단지 어느 당사국도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영토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동해상의 일본과, 남중국해상의 몇몇 동남아국가들과의 해상 영토분쟁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영토분쟁이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저자원을 공동개발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변해역 특히 대만해협을 통제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유사시 대만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국 근해에서 미사일과 잠수함으로 위협하는 미국 7함대 및 여타 국가의 군대를 견제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군사현대화도 이러한 계획 중 하나이고 이에 따라 인민해방군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인상적인 것은 현 중국 지도부가 국방예산 증액을 최우선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국방예산 증액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절박감은 없다는 뜻이다.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수입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 또한 커질 것이다. 중국은 충분한 석탄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광물도 풍부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중국이 자원 부국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철강, 구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철광석은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석유는 특히 그러하다. 중국이 이러한 광물에 대한 탐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뿐이다. 또한 해외기술을 대거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은 고유의 신기술 창출능력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기술자를 포함한 대학졸업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창조적 사고에 대한 제한이 완화(이는 중국 지도부의 또 다른 과제이다)되면 해소될 수 있다.

식품 및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주요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중국에게 새로운 취약성을 안겨준다. 그 중 제일 분명하게 눈에 띄는 것이 석유다. 미국 에너지부의 비

교추정치에 의하면, 2025년도 중국의 석유소비량은 2000년도의 480만 배럴에서 연 4.0% 증가한 1,400만 배럴이 된다. 1990년 초에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석유 순수출국이었던 중국이 2025년에는 거의 1,1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수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천연액화가스(LNG)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소비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는 가정과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탄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해안(또는 가스송유관)에서 가까운 지역과 석탄광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이다.

물론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의존도 심화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물리적 취약성 및 시장 교란에 대해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생산지 원유 확보에 크게 중점을 두고 세계 전역에서 석유탐사를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 및 수단과의 계약을 이미 성사시켰으며 러시아, 베네주엘라 등 다른 지역과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관련 업체들은 캐나다의 타르샌드(tar sand)에 투자하여 현재 태평양 연안까지 송유관을 건설 중이다. 또한 중국은 카자흐스탄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건설할 계획임을 표명하였고 러시아로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바다를 통한 석유수입의 의존도를 낮추고 석유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계획 때문이다.

결국 주요 원자재(석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현실적 인식이 15세기 이후 중국 해군력의 전통부재 및 한계성과 함께 어우러져,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무대에서 평화적이고 매우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및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향후 20년 간 세계 석유 증가분을 생산해야 할 페르시아만 지역의 안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핵발전소와 수력발전소, 심지어 내몽고의 풍력발전소 등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향후 20년 동안 건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석탄의 비중은 점점 작아지겠지만 석탄소비의 절대 수준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성비나 지구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시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나라는 유럽이나 일본,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석탄화력 발전시설은 한번 건설되면 반세기 동안 존속한다. 온실효과 가스인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고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개조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다. 그러므로 미국은 기술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타 선진부국과 함께 재원을 조달하고, 중국은 많은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므로 이를테면 실험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자연스런 협력분야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어떤 기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지 아직 모른다.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산화탄소 격리 부문에서는 성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분야야말로 협력가능성의 잠재력이 높은 것 같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즉 1914년도 이전 및 1941년도(소련침공 당시)의 독일과 1930년대 일본의 경우처럼, 중국이 취약한 주요 원자재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 공세적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의 주 대상은 러시아가 방어하고 있으며 인구가 희박한 시베리아 동부지역이 되거나, 동남아시아 지역 내 쿠데타를 지원하여 사실상의 중국 위성정부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당한 신규자원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나중에 중국이 필요한 석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도 미국 해군에 필적할만한 대양해군(공중지원이 갖춰진)을 구축하고자 할 수도 있다. 요컨대 일시적인 성과였지만 1930대의 일본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경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현대화된 해군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함 건조와 병력양성에도 수십 년이 걸린다.

중국은 정치적 환경과 주변정세가 적대적일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을 “위협세력”으로 보고 그렇게 대응한다면, 중국이 위협세력이라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질의응답

[질문] 북한과 중국에 관한 질문이다. 본인은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바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답변] 본인은 귀하의 질문 중에 “흡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말이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라면 본인으로서의 처음 듣는 의견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선 귀하의 질문은 이 시점에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시점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보다 상세한 내용에 정통한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중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본인의 느낌을 말해보겠다. 물론 이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중국, 구체적으로 중국의 두뇌집단(국방정책과 세계의 판도, 그리고 중국의 향방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다)은 북한의 현 정권에 대해 세계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당혹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들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에 주요 원자재 특히 에너지 관련 원자재를 지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량 부문의 지원도 하고 있다.

본인이 들은 바를 나름대로 전한다면, 중국의 기본 시각은 북한을 핵보유 이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그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에게 골칫거리이다. 중국으로서는 대안의 파장도 싫고, 이런 저런 대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력판도의 불확실성도 걱정거리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 당국으로서는 거부감이 가장 적은 방법이 “북한 정권을 생존만 시켜 현상유지를 계속하다 보면 상황을 개선할 어떤 계기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장은 현상유지의 계속이 아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중국 역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설사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핵실험을 할 모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실험이 성공할 경우(사실 본인은 실험이 성공할지 의심스럽다), 실험 그 자체가 일본 특히 미국의 불안감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이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을 택해 미사일을 끌어내고 연료를 채워 발사실험을 하고자 하는지가 모두에게 수수께끼인데,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대화와 지원을 얻기 위해 세계의 이목을 충분히 집중시키고자 북한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위험한 도박게임 방식의 한 부분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어디에서도 귀하와 같은 견해를 들은 바 없으며, 본인이 중국을 이해하는 바로는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아직도 만주라고 일컫는 중국 동북 3성에는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소수민족이 상당수 살고 있다. 사실 중국은 중국인 신분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한(漢)족은 소수민족들에 대해 언어는 다르지만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혈벗은 2천만의 북한 주민을 자국 경제권에 두는 것은 중국이 가장 하고 싶지 않는 일일 것이다.

[질문] 대만이 독립된 체제로 존속될 가능성은 어떠한가? 복수정당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답변] 중국은 대만의 현상유지를 크게 선호하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중국”이다. 그들 말에 의하면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되었던 방식, 즉 3~4개의 체제를 가진 하나의 중국이 대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체제가 대만 자체를 포함한 모두에게 중국의 주권으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다. 본인은 중국이 이러한 체제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략적 목표는 경제성장과 번영,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중국은 시장과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갖게 될 것이며, 대만인들은 대화 이외의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대만인들은 현 대만 총통과 그 후계자를 예측불허의 인물로 보고 있으며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만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요스러운 민주주의가 공공연히 독립의 방향으로 귀결되어 극히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대만독립은 중국 전체에 있어서 충분히 감정적인 문제이다. 중국 정부가 여론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지만, 공세적인 방식 특히 군사적인 방식의 조치는 향후 20년간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중국의 목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반드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중국은 현상유지를 크게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도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 처음에는 다소 친(親)대만적인 신호를 보냈던 부시 대통령이 지금은 대만과 중국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취해온 전통적 외교자세로 물러선 상태이다. 즉 군사력이 개입되지 않는 한, 대만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미국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중화민국(대만)의 현행 헌법이 오늘날의 대만으로서는 사실 매우 변칙적이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부시 대통령은 대만이 자국 헌법을 독립의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도록 강한 압력을 가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아도 중국은 보수적인 세력으로 현상유지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0년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600여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대만해협 건너편에 배치함으로써 위협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국 두뇌집단들은 위협정책으로는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새로운 팀은 그들이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대해 취해왔던 것처럼 대만에게도 유화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유화적 공세는 대만 야당인 국민당(KMT) 지도부의 환심을 얻는 형태를 취하면서 현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해협 건너편에 미사일기지를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질문] 중국은 외국자본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남미화”에 대해 우려하는 중국인들도 일부 있다. 귀하가 추정한 7.2%에는 외국기업들의 기여분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인가?

[답변] 아시다시피 중국은 예전의 일본이나 한국과는 매우 다른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초기에는 수출자유지역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었다)에 대한 문호개방이다. 초기 즉, 1980년대 초에서부터 수년간에 걸쳐 중국은 수출자유지역의 특권을 점진 확대하고 중국 내수 시장 판매를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도 장려해왔다.

20년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중국에게는 외국자본이 필요 없음이 분명하다. 사실 중국의 저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중국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주된 이유가 자본부족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 시장창구, 현대 경영기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대중국 투자유치의 주된 이유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유치정책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의 약 60%가 중국 내 이른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품질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경영기법과 시장창구도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가 계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본인의 대체적인 대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서구식 기업들의 영향과 훈련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창업한 중국 국내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구’라 함은 일반적 의미로써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중요한 그룹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중국의 민간기업들이 계속 성공을 이룸에 따라 중국에서 외국기업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며, 국영기업들의 상황이 나아지면서 크게 성공하는 국영기업들도 일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으며 낙오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외국기업들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외국기업은 하나의 성

공사례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기업의 중요성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중국 은행들은 높은 비율의 부실대출을 안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1990년대 말에 겪었던 금융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답변] 공식적으로는 중국 은행들의 부실대출 비율이 자산의 8%대로 하락했다. 이는 큰 폭의 하락이다. 그러나 시중의 평가는 부실대출 비율이 전혀 8%에 근접한다고 보지 않으며, 높게는 여전히 40%로 보기도 하지만 20%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경기가 활황이었던 2003년 말과 2004년에 대규모의 신규대출이 있었는데, 본인 추측으로는 이 신규대출의 대다수도 부실대출로 이어질 것 같다. 따라서 서구의 회계기준으로 보면 중국 금융시스템은 절차상 파산상태이다. 다행스럽게도 중국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으며, 알아챘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중국 은행권에 계속 저축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행태로 볼 때, 은행권이 파산지경에 이르면 그 은행이 민영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고 중국인들은 최소한 암묵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것이 올바른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자본 재조정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이미 한차례 투입한 상태이며, 일부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한차례 이상 투입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금투입이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도 중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하기 때문에 중국은 은행권에 대해 자금을 주기적으로 투입할 재정여력이 있다. 진짜 문제는 중국의 은행들이 행태를 바꾸어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상업대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약 1년 전 쯤에 중국건설은행(확실치는 않다)의 신임회장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예외적인 발표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은행 내 대출심사위원회가 은행의 공산당위원회인데, 중국의 주력은행 중 하나가 이를 전혀 받아들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은행의 공산당위원회가 대출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어떻게 상업대출을 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의 경영자세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변화와, 대출실무 책임자에 대한 훈련도 포함된다. 이는 큰 과제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흔히 그러하듯 중국에서도 이 모든 일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아마 이 문제는 중국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깊은 문제일 수 있으며, 공산당 내부의 권력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최고지도부 뿐만 아니라 중간간부도 해당된다. 또한 은행을 포함한 이른바 주요 민영기업, 지방공무원(이들은 모두가 공산당

당원이다), 그리고 기타 공산당 선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 간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이다.

장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본인과 대화를 나눈 모든 중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질문] 미-중간의 경상수지 불균형과 미국 적자에 대한 중국의 재원조달에 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미-중 관계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답변] 우선 본인은 양국 간의 불균형에 대해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50년이 걸렸다. 다자간 무역체제 내에는 도처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로인해 나타난 결과는 없다. 본인의 호주 친구들이 즐겨 언급하는 말이 있다. 즉 중국이 막대한 대미흑자를 내는 한편 호주도 대중국 흑자를 크게 얻고 있지만, 호주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삼각무역관계의 전형이다. 따라서 본인은 전체적인 불균형에 초점을 두겠다. 사공일 이사장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처럼 절묘하고 기발한 유형의 세계적 불균형에 대해 본인은 중국이 하나의 시장참여자일 뿐이라는 다소 비(非)전통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중국이 시장참여자이기는 하지만 역할은 단역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본인의 생각을 간단히 말하겠다. 여러분들도 읽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Understanding Global Imbalance"라는 본인의 논문이 있다. 그 논문의 요지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유형의 불균형이 이른바 금융시장 세계화와 노령화의 자연스런 결과라는 것이다. 노령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특히 유럽과 일본을 언급하였다가 나중에 중국까지 언급한 바 있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과잉저축이 이루어지게 되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일국으로서는 일본이 가장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인데, 독일경제와 긴밀한 제휴를 맺고 있는 네덜란드 및 스위스를 포함한 이른바 "확대된 독일"이 높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최근 OPEC도 유가로 인해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중국은 절대 무역규모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3~4위 수준에 불과하며, 그러한 중국이 미국 무역적자의 상대방이다.

우선, 지금의 인구동태와 세계화된 경제여건 하에서 노령인구가 자신의 저축을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의 국내 투자수익률(실질 자본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투자를 하되 투자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투자할 곳은 당연히 미국일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경제는 건실하고 활기차다. 그리고 재산권이 보장되며, 수익률은 낮지만 다른 여러 신흥시장 국가에 비해 수익안전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과거의 아르헨티나 및 러시아, 그리고 가장 최근의 볼리비아를 보면 신흥시장에서 민간자본 특히 외국인 민간자본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지금과 같은 유형의 불균형이 사실상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달러화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등에 대해 걱정하는 금융계 인사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 본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은 최소한 50%,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절묘한 유형의 불균형이 향후 10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는 징후가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s) 상에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독일 및 일본의 노인들이 자신의 해외투자를 현금화하여 소득대비 소비가 증가하면 이러한 유형의 불균형은 결국 와해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본인은 현재와 같은 유형의 불균형이 매우 안정적인 것이라고 본다.